

## 젠더와 건강팀 뉴스브리핑(2014년 1월 10일)

### \*국제 뉴스

#### [The Star] 캐나다 대법원 연방 성매매법안 폐기를 결정하다

- 캐나다 대법원이 연방정부에 12개월 내에 헌법에 위배되는 형법을 수정하거나 성매매를 허용하도록 함으로써, 금요일날 엄청난 사회적, 법적, 정치적 논쟁을 촉발시켰다.

톤타 맥찰스/ 2013년 12월 20일 금요일

기사 원문출처:

[http://www.thestar.com/news/canada/2013/12/20/supreme\\_court\\_of\\_canada\\_strikes\\_down\\_federal\\_criminal\\_prostitution\\_laws.html](http://www.thestar.com/news/canada/2013/12/20/supreme_court_of_canada_strikes_down_federal_criminal_prostitution_laws.html)

<오타와> 캐나다 대법원이 금요일 엄청난 사회적, 법적, 정치적 논란을 불러일으켰는데, 이는 연방정부에 12개월 간 헌법에 위배되는 형법을 수정하거나 다른 기업과 마찬가지로 성매매를 허용하도록 하라는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성매매, 사회정책옹호단체, 경찰 및 경찰관들의 즉각적인 반응은 이 논쟁이 감정적이지, 격하게 개인적이면서도(personal), 고도로 정치적인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정치인들은 고객으로써 우리를 알고 있을지도 모르지만, 정치인들은 성노동자들이 어떻게 일하는지 이해하지 못한다” 소송을 제기한 전 성노동자(former prostitute) 발레리 스콧(Valerie Scott)이 말했다. “그들이 절반쯤이라도 괜찮은 법안(half-decent law)을 쓸 수 없다면, 이 소송은 실패할 거다.”

9대0 만장일치였던 판결에서, 수석재판관인 비버리 맥라클린(Beverley McLachlin)은 다음과 같이 썼다. “돈을 벌기 위해 성을 파는 것은 캐나다에서는 범죄가 아니다.” 그러나, 법원은 3가지 주요한 형법상 금지조항- 윤락업소(brothel)에서 성을 사고파는 것을 목적으로 성매매를 활용하고 공개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아 먹고사는 것-이 위헌적으로 광범위하며 전세계적으로 가장 오래된 직업을 갖고 있는 취약하고 소외된 여성의 권리현장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안전하지 않은 길거리로 이들을 내몰게 되면, 잠재적으로 술에 취하고, 폭력적이거나 콘돔사용을 무시하는 성적으로 난폭한 고객에게 휘둘리도록 노출되는 것이고, 이는 ‘개인의 보안’(security of the person)을 헌법에서 보장하는 것을 위반하는 것이다.

“의회는 방해행위(nuisances)를 규제할 힘이 있으나, 성노동자들의 건강, 안전, 삶을 뺏아 해서는 안된다”고 법원은 밝혔다. [위의]이 규정들은 ‘성매매 방식에 단순히 조건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성매매에 위험한 조건을 부과하여 한층 더 심각한 단계로 나아가고 있는데, 이는 위험한-그러나 합법적인-활동에 종사하는 이들이 위험으로부터 스스로 보호해야 하는 단계를 밟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

법원은 원주민 여성들(aboriginal women)의 어려움과 연쇄살인범 로버트 픽톤(Robert Pickton)의 소외된 희생자들을 인용하면서, 밴쿠버가 형사제재 위협을 없애고 거리의 여성들을 보호하고자 설정한 ‘안전한 집’[프로그램]에 주목한다고 했다.

판결에 이긴 성노동자들은 환호하며 위엄에 찬 대법원 건물을 가로질러 다녔다. 발레리 스콧

은 성노동자들은 캐나다 연방정부 국세청(Canada Revenue Agency)와 일할 수 있어야 하며, 노동건강 및 안전규정으로 보호받아야 하고, 산재보상 및 “연금보험! 그렇지!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의회에서 실내윤락업소를 합법화하고, 안전요원과 운전기사, 경호원, 회계원 및 접수담당자 고용을 합법화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에 따르면, 성매매는 주요하게 여성건강과 안전을 담당하게 되는 지방자치 또는 지방정부제도에서 담당하고, 세금을 매기며, 규제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제, 법적이고도 정치적인 딜레마가 있다.

오타와에서 이에 대한 대응을 숙고하는 있는 동안 전국의 경찰 및 주정부경찰은 어떤 성매매 혐의(prostitution charges)를 부과할지 결정해야만 할 것이다.

“이 판결에 대한 우리의 초기평가는 이것이 성매매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오타와 경찰서장 찰스 보델루(Charles Bordeleau)는 성명에서 이렇게 말하면서, 지역의 우려와 불만이 “[이 법이]시행되는 ‘핵심요인’이 된다, 우리는 이러한 법안이 경찰에게는 타당하며 [수용]가능하다고 이해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보델루는 그가 의외 및 온타리오 법무장관으로부터 정치적 지시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온타리오 법무장관이자 형법사무소 대변인 브랜단 크롤리(Brendan Crawley)는 주에서 이 판결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것이 경찰관 및 검찰검사들에게 다가오는 12개월 동안 효력이 남아 있는 법을 적극적으로 시행할 것을 지시하게 될지는 언급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연방 보수정부의 반응은 신속하고도 못마땅해하는 모습이였다.

법무부장관 피터 맥케이(Peter Mckay)는 “우려하면서” “우리는 형법으로 성매매에서 지역, 성매매에 종사하는 이들, 취약한 사람들에 흘러가는 중요한 위해를 처리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모든 가능한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

법원은 더 합헌적인 해결책을 내놓으려 노력하지 않았다. 대신, 판사들은 국회의원들에게 이 ‘까다로운’ 문제를 넘겨주었다. 더 좁혀진 목표를 대상으로 하는 형법제도가 제정될 가능성도 열려있다.

함에도, (수상 스테판 하퍼(Stephen Harper)가 지명한 5명의 사법적 피지정인이 서명한) 이 판결은 보수정부가 오랫동안 지속했던 관점-판사들은 너무 활동가적이고 법을 폐기하려 든다-에 당연히 딱 들어맞게 되었다-

하퍼는 <포스트미디어(Postmedia)>와의 연말인터뷰에서 피해자의 권리를 중심에 두는 관점으로 사법체계방향을 틀기로 마음먹고 있으며, 범죄자들에게, 비방받은(maligned) 피해자 추가요금을 부과되는 등의 방법을 보장하기 위해 임명(appointemnts to the bench)을 변경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보수정당이 성매매활동을 다시 범죄화하려면 정치적 연합을 마련하게 될 것이며, 이는 단지 종교그룹이나 지난달에 풀뿌리 단체의 회원들, 즉, 지난 달에 “성구매로 이익을 취하려는 제3당의 활동뿐 아니라, 성구매를 범죄화하여 성구매 및 인신매매시장을 목표로 하는 특별프로그램”에 찬성하여 투표를 했던 이들에만 그치지 않는다.

여성단체들은 소외된 성노동자들에 대한 폭력을 끝내기 위한 올바른 해결책에 대해 의견이 같

렸으며, 성구매를 형법으로 금지하는 것을 많이 지지하고 있다.

김 페이트(Kim Pate), 재닌 베네딕(Janine Benedet) 변호사는 성매매철폐를 위한 여성연합을 대변하여-이 조직에는 캐나다 엘리자베스 프라이 사회연합(Canadian Association of Elizabeth Fry Societies), 캐나다 성폭력센터연합(Canadian Association of Sexual Assault Centers), 원주민 여성연합(Native Women's Association of Canada), 밴쿠버 성폭력안심사회(Vancouver Rape Relief Society)등이 포함되어 있다-이번 법원 판결을 크게 실망했다고 전했다.

이들은 오타와가 법제도의 북유럽국가 모델을 수용하여, 성구매자와 성매매서비스를 구하려는 행위에 대해 불법화해야 한다고 말한다. 북유럽에서는 합법적인 성 판매를 하는 실내장소를 여성의 집이나 그 지역으로 제한하고 있다. 그 외에 다른 이들은 뉴질랜드를 꼽으며, 여기서 성매매활동은 비범죄화되어 있지만, 지방자치당국에 규제되기는 한다고 전했다.

그러나 소송을 제기하고 승리를 거둔 성노동자 3명은 금요일이 축하를 만끽하는 날이었다. 스콧(Scott), 가족채찍을 휘두르던 테리 진 벅포드(Terry Jean Bedford), 에이미 레보비츠(Amy Lebovitch)는 웃고 환호했다. 폭력에 반대하는 밴쿠버 성노동자 연합의 로르나 버드(Lorna Bird)는 이번 판결을 “커다란 승리”라고 불렀다. “저 밖에 모든 나의 자매들은 이제 안전하게 된다.”

---

#### [Telegraph]스페인 정부가 새로운 낙태 제한법을 승인하다

마드리드, 피오나 고반/ 2013년 12월 20일

기사원문출처:

<http://www.telegraph.co.uk/news/worldnews/europe/spain/10531811/Spain-approves-new-restrictive-abortion-law.html>

스페인 정부가 낙태에 대해 엄격하게 제한하는 법을 승인했는데, 이에 따르면 강간사건일 경우 또는 산모나 태아의 건강에 심각한 위험이 있을 때만 낙태가 허용된다.

스페인 보수정부가 여성들이 자유롭게 낙태를 선택하는 것을 금지하는데 동의하였으며, 프로 초이스 활동가들은 이에 분노, 이는 나라를 1980년대로 퇴보시킬 것이라 말했다.

정부수상인 마리아노 라호이(Marian Rajoy)는 카톨릭교회의 압력을 받아, 전 사회주의정부에서 만들어진 개혁안, 즉, 임신 14주까지 제한 없이 낙태를 허용했던 개혁안을 후퇴시키기로 결정했다.

금요일날 정부내각에서 승인된 법안에 따르면, 낙태가 오직 강간, 심각한 태아 기형 또는, 임신이 산모에게 심각한 정신적, 육체적 위험이 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이건 우리 선거내용에 있던 것이다”라며 라호이 수상은 EU회담에 참석한 브뤼셀에서 어제 밝혔다.

낙태를 엄격히 하는 것은 야당에서도 맹렬한 저항에 부딪혀왔으며, 스페인 전체 여성단체에서도 프랑코 독재의 어두운 시절로 여성의 권리를 역행하는 것이라 말했다.

보수 국민정당이 의회에서 명백한 다수라서 통과시킨 새 법안으로 인해, 일부에서는, 여성들이 낙태를 해외에서 받을 수밖에 없는 '낙태관광'이 생기거나 불법클리닉에서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의 결정권을 역전시키는 것이며, 이는 또다른 시대로 우리를 보내는 것, 또다른 시대로의 퇴행이다”. 여성권리그룹을 위한 연합조직인 페미니스트

코디네이터(Feminist Coordinator)는 성명에서 이렇게 말했다.

그리고 이러한 결정에 반대하는 저항을 호소하고 있다. “우리는 30년전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며, 무엇보다 우리는 스스로 물러나지 않을 것이며, 포기하거나 위협당하지 않을 것이다”. 사회주의 야당의 부대표인 엘레나 발레시아노(Elena Valenciano)가 밝혔다.

법무부장관인 알베르토 루이스-갈라돈(Alverto Ruiz-Gallardon)은 이전의 1985년 제정법이 그러했듯이, 새로운 법안은 어떠한 경우에도 낙태를 하는 여성을 범죄화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 법안이 “태어나지 않은 아이의 삶과 여성의 권리를 둘다 모두 보호하는 방어책”이 될 것이라고, “여성의 이해를 위해서 언제나 효력을 발휘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이 법안에서 16~17세 여성청소년들이 부모 동의 없이 낙태하려는 것을 허용하는 조항을 폐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낙태 문제는 스페인에서 긴 논쟁이 되어왔다. 호세 루이스 로드리게즈 자파테로(Jose Luis Rodriguez Zapatero) 정부 아래서, 수백, 수천이 거리를 행진하며, 이 법이 완화되는 것에 반대했으며, 로마 카톨릭교회에 의해 시위가 일어나기도 했다.

2010년 개혁법안이 통과된 이후, 낙태건수는 유의미하게 높아지지 않았으며 마드리드 같은 일부지역에서는 사실상 줄어들기도 했다.

스페인은 유럽연합에서 낙태 합법화 이후 후퇴한 최초의 국가이다.

---

## [Euronews] 낙태개혁안은 의료진에게 반대할 권리를 주게 된다 : 스페인의 모순적인 낙태개혁안

- 카라필리스 지안누리스(Karafillis Giannoulis), 2013년 12월 23일

원문출처: <http://www.neurope.eu/article/controversial-abortion-reform-spain>

스페인의 일간지 <엘 파이스>는 스페인의 낙태개혁안이 국회에서 수많은 난관을 일으키고 있다고 밝혔다..

낙태개혁안은 의료진이 양심적으로 낙태에 반대할 권리를 갖는 걸 허용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금요일 새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스페인 일간지에 따르면, 이 법안은 산모의 건강에 심각한 위험이 되거나, 임신이 강간으로 인한 경우일 때를 제외하고 다른 어떠한 경우에도 여성의 낙태할 권리를 실질적으로 앗아가 버린다. 사회주의 정당에서 도입한 이전의 법제도와 달리, 의사업에 종사하는 모든 회원들은 양심적으로 낙태와 관련하여 반대할 권리를 갖게 된다. 이전의 법제도에서는 시술을 하는 의사와 조산사, 마취전문에게만 그 권리가 주어졌다.

이 모순적인 낙태개혁법안은 전국적인 저항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금요일, 수백명이 정부청사 바깥에서 모여 이 법안의 배후인물인 사법주장관 알베르토 루이스-갈라돈(Alberto Ruiz-Gallardon) 사람인형을 불태우는 등 시위가 일어났고, 이 법안에 저항하는 시위대 3명이 마드리드에서 체포되었다. 빌바오, 카라가, 바르셀로나를 비롯한 약 20개 다른 도시에서도 시위가 조직되었다. <인디펜던트>에 따르면, 모든 주요야당들은 제출된 새로운 법안을 비난하고 있다. 사회주의정당 대변인 엘레나 발레시아노(Elena Valenciano)는 “이 법은 여성의 자발성을 침해하기 때문에 불필요한데다, 회의적이며, 불공정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새로운 낙태개혁안은 보수 국민정당(PP)가 의회에서 명백한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엘 파이스>는 사회주의정당이 의회에서 법안에 대한 최종투표를 실시하되 비밀로 하도록 요구하고 국민정당 의원들에게 생각을 바꾸어 개혁안에 반대표를 던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성권리그룹의 연합조직인 '페미니스트 코디네이터'는 성명에서 모순적인 낙태개혁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의 결정권을 되돌리는 것이며, 이는 우리를 역사의 다른 시대로 되보시키게 될 것이다."

---

## \*국내 뉴스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글로벌 보건산업 동향 (Vol.88, 2013.12.27.)에서 재인용

#### 독 연정, 미성년자 성형수술 금지 추진

○ 최근 대연정에 합의한 독일 기독교민주당(CDU)과 사회민주당(SPD)이 18세 미만 미성년자들에 대한 성형수술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

- 이들 정당의 보건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화상을 입거나 신체 일부가 기형일 때 치료 목적으로, 혹은 외모로 인해 정신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보이는 경우를 제외하곤 미성년자들에 대한 성형수술이 금지되어야 한다는 데 의견이 일치

\* 현재 독일에서는 부모 등 친권자의 동의가 있으면 미성년자도 코, 가슴, 지방흡입술 등 성형수술이 가능

- 그러나 미성년자 성형수술이 금지되더라도 문신이나 신체의 특정 부위를 뚫어 장신구를 부착하는 피어싱은 지금과 같이 허용할 계획

- 한편 LBS은행이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9~14세 청소년 7명 중 1명이 미용 목적으로 성형 수술을 받는 것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Cosmetic Surgery, 2013.12.12.]

#### EU, 성매매 규제론 확산 ... 프랑스 성매매 처벌법 통과 여파

○ 프랑스 하원에서 성매매 처벌법이 통과됨에 따라 영국·독일·네덜란드 등 EU 각국에서도 성매매 규제론이 확산

- 이는 인근 국가에서 성매매 규제가 강화되면 성매매 종사자 유입이 증가해 자국이 유럽의 성매매 중심지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 비롯

- 영국에서는 정부가 추진하는 인신매매 처벌법 개정안에 성매매 처벌 조항을 포함시키자는 여론이 고개

\* 영국에서는 성매매 제의나 알선, 성매매 업소 운영 등은 불법 행위로 처벌 대상이나 성매매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따로 없는 상황

- 독일에서는 여성운동 단체들이 지난 '02년 중도좌파 연립정부가 성매매를 합법화한 이후 독일이 성매매업의 천국이 됐다며 동 법의 폐지를 촉구

- 네덜란드 정부는 성매매 업소에 대한 규제를 강화, 지역 당국이 승인하지 않은 성매매 영업 시설을 불법화하는 법안을 추진 [Guardian, 2013.12.11]

#### 호주 모나쉬대, 획기적 남성 피임법 개발

○ 호주 모나쉬대 연구팀이 정액 속 정자를 요도를 통해 운반하는 두 가지 단백질 생산 유전

자를 무력화시킨 획기적 남성피임법을 개발했다고

미국국립과학원회보(Proceedings of National Academy of Science)에 발표

- 성관계 시 정액이 사정되면 평활근 세포에 있는 두 단백질 ‘알파-1A 아드레노셉토( $\alpha$  1A-adrenoceptor)’와 ‘P2X1-푸리노셉토(P2X1-purinoceptor)’가 정액 속 정자를 요도를 통해 운반

- 연구팀은 이 두 단백질을 차단함으로써 생식기능 자체에는 아무런 영향 없이 불임만 유도하는 실험에 성공

\* 실제로 숫쥐에 이 단백질들을 만드는 유전자를 무력화시킨 결과, 숫쥐가 암쥐와의 짝짓기에서 정상적으로 사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암쥐는 새끼를 배는데 실패

- 연구팀은 이번에 개발된 방법이 남성호르몬과 정자 생산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은 상태에서 정자를 운반만 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안전하고 효과적인 피임법이 될 수 있다고 소개 [Euro Weekly News, 2013.12.12.]

### [경향]여성 노인 빈곤율 45%…남성보다 5%p 높아

최희진 기자 [daisy@kyunghyang.com](mailto:daisy@kyunghyang.com)/ 2013년 12월 29일

· 10명 중 2명만 국민연금 받아/ · “최저생활 가능한 연금 지급을”

여성 노인들의 빈곤율이 남성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노인들은 10명 중 2명만 국민 연금을 받고 개인저축액도 적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9일 공개한 ‘여성 노인의 생활실태와 빈곤해소 방안’ 보고서를 보면 2011년 현재 여성 노인의 빈곤율은 45.9%로 남성 노인(40.1%)보다 5%포인트 이상 높았다. 빈곤층 평균소득과 빈곤선의 격차를 나타내는 지표인 ‘빈곤갭’도 전체 노인 평균은 15.8%였지만 여성 노인은 더 높은 19.3%로 조사됐다.

여성 노인의 빈곤이 남성보다 심각한 이유는 경제활동 기간이 없거나 짧아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했거나 적은 액수만 납부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보고서를 작성한 장미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여성 노인들의 경제활동이 가능했던 시기 한국 사회는 산업화되는 과도기여서 여성을 위한 일자리가 제한돼 있었다”며 “교육수준도 낮아 일할 수 있는 직종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지난해 말 현재 국민연금 수급률을 보면 남성 노인은 전체의 45.5%가 받지만 여성 노인은 20.3%만 받고 있다.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은 여성 수급자가 전체의 58.8%로 남성 수급자(41.2%)보다 많았다.

장 연구위원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짧더라도 실질적 연금급여액이 최저생활을 보장해주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이때 시간제나 자영업 종사자의 비중이 높고 남성보다 임금수준이 낮은 여성 노동의 특성을 반영하고, 돌봄노동의 가치를 고려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 [미디어오늘]30·40대 여성들, 박근혜 지지철회 ‘이유’ 있었네

7달 사이 부정평가 두배, 남성 지지율과 대비…“여성대통령 아닌 여왕님” “종북몰이 몰두, 민생변화 없어”/ 입력 : 2013-12-20 14:54:52 이재진 기자 | [jinpess@mediatoday.co.kr](mailto:jinpess@mediatoday.co.kr)

박근혜 대통령 당선 1년을 맞아 30~40대 여성 지지층이 박 대통령의 지지를 철회하는 통계가 잇따라 집계되고 있다. 당초 우리나라 최초 여성 대통령이라는 타이틀에 여성 고정 지지층이 있었지만 집권 1년 동안 국정운영방식을 보고 여성 대통령으로서 메리트가 사라졌다고 판단하면서 지지를 철회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여론조사기관 <리서치뷰>가 5월 31일, 9월 28일, 10월 27일, 11월 19일~20일, 11월 30일~12월 1일, 12월 18일 등 여섯 차례 기간에 걸쳐 '박근혜 대통령 직무평가'를 정례조사(RDD 휴대전화 방식)한 결과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했던 30~40대 여성층에서 두배 가까이 지지를 철회한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박근혜 대통령 직무평가를 처음 조사한 5월 31일 40대 여성 중 43.3%는 박 대통령이 직무수행을 '잘함'이라고 평가하고 31.5%가 '잘못함'이라고 답변했다. 그리고 9월 29일 조사에서는 '잘함'이 56.1%, '잘못함'이 36.2%로 집계됐고 10월 27일에는 '잘함' 42.5%, '잘못함' 43.8%, 11월 19일~20일 조사에서는 '잘함' 47.2%, '잘못함' 44.6%, 11월 30일~12월 1일 '잘함' 43.3%, '잘못함' 39.5% 그리고 대선 1년 하루 전인 12월 18일 마지막 조사에서는 '잘함' 25.5%, '잘못함' 68.7%로 집계됐다.

지난 7개월 사이에 무려 '잘못함'이라는 평가가 두배 이상 늘었고 반면, '잘함'이라는 평가는 두배 정도 줄어든 것이다. 내용으로 보면 40대 여성들은 지난 5월까지만 해도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과반이 넘었지만 역전이 돼버린 셈이다.

이 같은 추이의 특징은 40대 남성의 직무 평가와 비교하면서 확연히 드러난다. 40대 남성의 경우 5월 31일 조사에서는 '잘함'이 44.4%, '잘못함'이 48.3%로 오히려 박 대통령의 직무수행을 부정적으로 보는 평가가 많았지만 마지막 조사인 12월 18일에는 '잘함' 36.6%, '잘못함' 58.3%로 약 10% 이상 잘못했다는 평가가 늘어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20대, 30대 남성과 20대, 30대 여성의 박근혜 대통령의 직무평가를 비교해도 여성의 박 대통령 지지 철회 양상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5월 31일 20대 남성 중 38.6%은 박 대통령의 직무평가에 대해 '잘함', 43.2%가 '잘못함'이라고 평가했고 마지막 조사 때인 12월 18일에는 '잘함' 33.8%, '잘못함' 58.4%로 집계됐다. 약 15% 정도 잘못했다는 평가가 늘었다.

반면, 5월 31일 20대 여성 중 43.4%가 '잘함', 43.2%가 '잘못함'이라고 평가해 박 대통령의 직무 수행 평가가 비슷했지만 12월 18일에는 무려 '잘함'이라는 평가는 11.6%, '잘못함'이라는 평가는 80.1%로 나왔다. 40대 여성 직무평가와 비슷하게 두 배 가깝게 박 대통령의 직무평가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늘어난 것이다.

30대 남성과 30대 여성의 직무평가를 비교해도 마찬가지다. 5월 31일 30대 남성 평가를 보면 '잘함' 36.4%, '잘못함' 54.5%에서 12월 18일 '잘함' 30.1%, '잘못함' 65.5%로 집계됐다. 잘못했다는 평가가 약 10% 정도만 늘어난 것이다.

이에 반해 5월 31일 30대 여성 중 '잘함' 52.1%, '잘못함' 32.2%로 나왔지만 12월 18일 '잘함' 19.9%, '잘못함' 68.9%로 집계돼 두배 이상 잘못했다는 평가가 많아졌다.

±2.8%p		빈도	잘 함	잘못함	기타	전체
		1200	53.5	29.7	16.8	100.0
성별	남성	596	50.3	33.4	16.3	100.0
	여성	604	56.6	26.0	17.4	100.0
연령	19/20대	212	44.3	38.7	17.0	100.0
	30대	242	44.2	43.4	12.4	100.0
	40대	259	40.9	37.5	21.6	100.0
	50대	233	59.7	17.2	23.2	100.0
	60세 이상	254	77.2	12.6	10.2	100.0
남성	19/20대	113	45.1	36.3	18.6	100.0
	30대	121	36.4	54.5	9.1	100.0
	40대	132	38.6	43.2	18.2	100.0
	50대	118	61.9	14.4	23.7	100.0
	60세 이상	112	72.3	16.1	11.6	100.0
여성	19/20대	99	43.4	41.4	15.2	100.0
	30대	121	52.1	32.2	15.7	100.0
	40대	127	43.3	31.5	25.2	100.0
	50대	115	57.4	20.0	22.6	100.0
	60세 이상	142	81.0	9.9	9.2	100.0

▲ 지난 5월 31일 박근혜 대통령 직무평가 조사 결과

±3.1%p		빈도	잘 함	잘못함	기 타	전체
		1000	44.3	48.3	7.4	100.0
성 별	남 성	496	45.8	47.5	6.7	100.0
	여 성	504	42.8	49.1	8.1	100.0
연 령	19/20대	180	23.3	68.7	8.0	100.0
	30대	196	25.1	67.1	7.8	100.0
	40대	216	31.3	63.4	5.3	100.0
	50대	193	62.5	29.5	8.0	100.0
	60대	215	76.0	15.7	8.3	100.0
남 성	19세/20대	95	33.8	58.4	7.8	100.0
	30대	100	30.1	65.5	4.4	100.0
	40대	110	36.6	58.3	5.1	100.0
	50대	99	56.1	37.0	7.0	100.0
	60세 이상	92	75.3	14.9	9.8	100.0
여 성	19세/20대	85	11.6	80.1	8.2	100.0
	30대	96	19.9	68.9	11.3	100.0
	40대	106	25.8	68.7	5.5	100.0
	50대	94	69.3	21.7	9.0	100.0
	60세 이상	123	76.4	16.3	7.2	100.0

▲ 지난 12월 18일 박근혜 대통령 직무평가 조사결과

전체 남녀 성별로 집계로 직무평가 조사에서도 5월 31일 남성은 50.3%가 '잘함', 33.4%가 '잘못함'이라고 평가하고 12월 18일에는 '잘함' 45.8%, '잘못함' 47.5%로 나왔지만 5월 31일 여성은 56.6% '잘함' 26.0% '잘못함' 으로 집계됐지만 12월 18일에는 '잘함' 42.8%, '잘못함' 49.1%로 나와 남성보다 박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확연히 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세대별 직무평가 변화 추이를 볼 수 있는 5월 31일 조사와 12월 18일 조사를 비교한 결과에서는 20대가 30%, 30대가 23.7%, 40대가 25.9%, 50대가 12.3%, 60대 이상 3.1%가 '잘못함'이라는 직무평가 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30대 젊은 층에서도 시간이 갈수록 박근혜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뜻이다.

전현직 대통령 호감도 조사에서는 박근혜 대통령 경우 10월 27일에는 18.5%의 호감도를 보였고 12월 18일에는 19.0%로 나와 약 0.5% 상승했다. 같은 기간 노무현 전 대통령은 34.3%에서 35.3%로 호감도가 1% 상승한 것으로 나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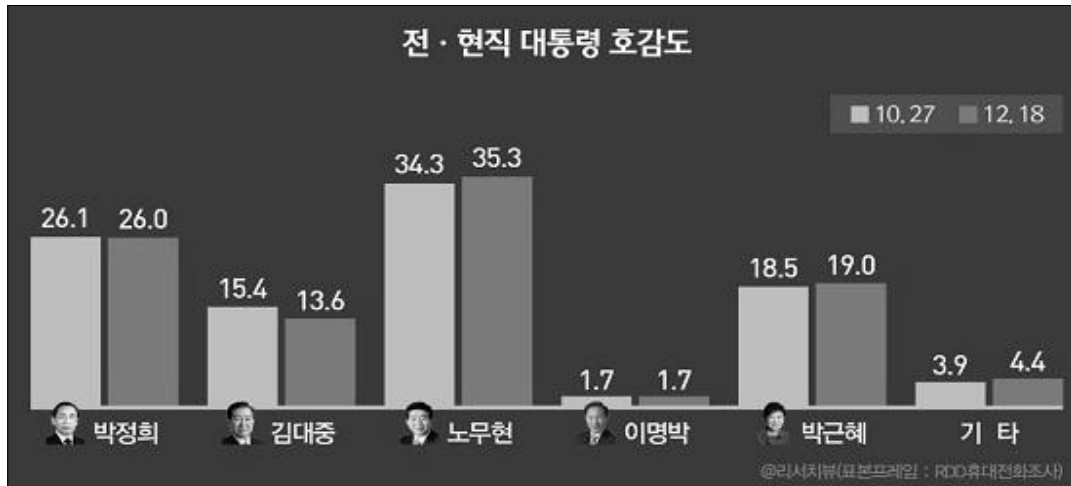
이번 조사에서는 30~40대 여성의 박근혜 대통령 지지층이 '변심'했다는 뜻으로 읽어도 무방할



정도도 변화 추이가 심해 다양한 분석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30~40대 여성들은 이제 막 가정을 꾸리거나 한참 크는 아이들의 부모 세대로 경제적 비용이 가장 많이 들어가는 세대이기 때문에 '민생' 문제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 지난 7개월 동안 별다른 변화를 느끼지 못한 30~40대 여성들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실망감을 더 많이 느끼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최초 여성 대통령'이라는 타이틀이 30~40대 여성에게 호감을 줬지만 국정운영방식과 여성 정책 등을 봤을 때 전혀 '여성' 대통령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어 지지 철회로 가닥을 잡았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 전현직 대통령 호감도 조사 결과

한국여성노동자회 임윤옥 부대표는 "여성들이 박근혜 정부의 이념 전쟁과 정파적 싸움을 보고 민생을 챙겨주고 보살펴줄 것이라는 어머니라는 이미지 환상이 산산조각이 나면서 지지를 철회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임 부대표는 "처음 그렇게 여성 대통령을 강조하더니 지금은 여성 대통령이라는 생각조차 나지 않고 하늘에 계신 여왕님 같은 범접할 수 없는 이미지가 돼버렸다"고 비난했다.

특히 임 부대표는 "30~40대 여성들 입장에서는 이명박 정부에서도 별다른 민생에 변화를 느끼지 못하다가 박근혜 정부 1년을 맞았기 때문에 단순한 1년이 아니라 지난 6년 동안 민생이 어려운 연장선상에 있어 기다려줄 여유가 없고 임계치에 다다른 것"이라며 "여성들은 또한 매일매일 가족이 삶을 꾸리면서 민생에 대한 감수성이 매우 높을 수밖에 없는데 오로지 종북몰이에 몰두하고 여성들의 일자리 개선은 없는 상황을 보고 지지를 철회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여성들에 대한 정책 약속이 지켜지지 않은 것도 지지 철회의 요인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공공부문 여성 비정규직 노동과 삶 실태조사(11월 윤자영 한국노동연구원 박사)에 따르면 2012년 고용노동부와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지침'을 마련했지만 2013년 4월 현재 공공부문에 고용된 직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는 249,614명, 그 가운데 지자체에 직접 고용된 비정규 노동자만 49,349명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올해 9월 5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계획'을 다시 발표했지만 그 수가 2015년까지 65,700여명에 그쳤다.

윤자영 박사는 "공공부문 기간제 노동자들이 25만명이나 되는 현실을 감안하면 공공부문 비정규 노동자들을 전원 정규직화하겠다는 공약마저 후퇴시키고 있는 것이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박사는 또한 "정규직 전환을 예산 증액 없이 기관들의 자체 예산으로 충당하라고 하니 해당 정규직으로 전환된 무기계약직들은 무늬만 정규직일 뿐 임금과 노동조건에서 정규직과 현격하게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다"며 "공공기관은 무기계약직 전환을 안 하고 기간제 노동자들을 해고하거나 외주로 돌리고 다른 기간제 노동자로 교체사용하는 행태도 여전히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 [SBS]"임신중 흡연 여성의 딸, 니코틴 의존 위험 ↑"

최종편집 : 2014-01-10 10:22

임신 중 흡연과 스트레스 호르몬에 노출된 여태아는 나중 니코틴 의존성이 나타날 위험이 크다는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미리암 병원(로드아일랜드 주 프로비던스 소재) 행동·예방 의학센터의 로라 스트라우드 박사가 1천86명의 여성이 출산한 딸 649명과 아들 437명의 40년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이 밝혀졌다고 사이언스 데일리가 9일(현지시간) 보도했습니다.

임신 중 담배를 피우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솔의 혈중수치가 높은 여성이 출산한 딸은 나중 성인이 되었을 때 니코틴 의존성 위험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스트라우드 박사는 밝혔습니다. 임신 중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 과다와 흡연이 모두 출산한 딸의 니코틴 의존성 위험을 증가시키는 것은 담배를 피우는 여성은 대체로 스트레스받을 일이 많거나 생활여건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런 여성이 출산한 아들은 니코틴 의존성 위험과 연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이유는 알 수 없으나 니코틴과 코티솔이 여성과 남성의 뇌에 다르게 작용하기 때문일 수 있다고 스트라우드 박사는 설명했습니다. 결국 임신 중 담배를 피우면 출산한 딸도 임신했을 때 담배를 피울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이며 이는 대대로 악순환될 가능성이 있다고 그는 지적했습니다. 이 연구결과는 '생물정신의학'(Biological Psychiatry) 최신호에 실렸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 [연합]은행 男임원, 女의 27배...입사자는 여성이 2배로 많아

"남성 많은 인력구조 탓...여성 조기퇴직이 근본 원인"/2014. 1. 8

(서울=연합뉴스) 홍정규 고유선 김승욱 기자 = 최근 5년간 은행권에서 남성 임원이 여성보다 27배 많이 배출됐다. 은행을 나간 직원은 여성이 남성보다 많았다.

여성 대통령 시대를 맞아 최근 몇몇 은행에서 여성 임원의 '약진'이 나타났지만, '여풍'이라는 표현을 쓰기에는 매우 부족하다는 평가가 많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2009~2013년 8개 주요 국책·시중은행의 본부장 이상 기용 성비(性比)는 27대 1로 집계됐다.

매년 27명의 남성이 임원으로 승진·연임하는 동안 여성 임원은 겨우 1명이 나온 셈이다. 국내 최초 여성 은행장인 권선주 기업은행장이 임명된 지난해 이 비율이 22대 1로 다소 개선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여성 임원 비중은 작은 수준이다.

은행들은 여성 임원이 적은 배경으로 기존의 인적 구조를 꼽았다. 20~30년 전 입학해야 임원

에 오를 수 있는데, 여성 인력풀이 적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한 시중은행 인사 담당 부장은 "임원 후보군에 남성이 여성보다 많은 인적 구조가 아직 해소되지 않았다"며 "앞으로는 여성 임원이 더 나올 것"이라고 예상했다.

본부장 승진 대상인 부서장·지점장에 여성이 적은 더 근본적인 원인은 여성 인력의 '조기 퇴출'이라는 분석이 많다. 부서장이나 지점장에 오르기 전에 자의든 타의든 은행을 그만두는 여성이 많다는 뜻이다.

신한은행 첫 여성 임원인 신순철 부행장보는 "여성 임원 후보군이 많아지려면 출산·육아로 일찍 그만두는 여직원이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09~2013년 퇴직자는 2만4천789명이다. 남성이 월등히 많은 은행 인적 구조와 달리, 퇴직자는 여성이 1만2천962명으로 오히려 남성(1만1천827명)의 1.1배다. 같은 기간 채용은 2만3천447명이다. 여성이 1만5천178명으로 남성(8천269명)의 1.8배다. 여성을 많이 뽑지만, 임원은 남성이 차지하고 여성이 주로 나간 것이다.

은행권 노조 관계자는 "재무나 여신 등 핵심 부서는 여전히 '금녀(禁女)의 벽'이 있다"며 "출산·육아가 여성의 경력 단절에 결정적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은행들은 최근 출산휴가를 포함한 육아휴직 2년 보장, 복직 전 재교육, 어린이집 등 여성의 출산·육아 지원책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인사상 불이익 등을 우려해 중도에 복직하거나 육아 또는 추가 출산의 부담으로 아예 직장을 그만두는 여성 은행원이 여전히 적지 않다.

신 부행장보는 "은행을 그만두지 않으려고 두 자녀를 시어머니께 맡길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역시 두 자녀를 둔 권 행장은 "출산휴가로 3개월이 주어졌지만, 1개월만 쓰고 나와야 했다"며 "토요일까지 근무하고 이튿날인 일요일에 둘째를 낳았다"고 말했다. '여성이 살아남기 어려운 문화'는 감독기관인 금융감독원이나 한국은행도 다르지 않다.

금감원·한은의 여성 임원은 5년간 연인원으로 모두 5명이다. 같은 기간 남성 임원은 125명(금감원 61명, 한은 64명)으로, 여성 임원보다 25배 많다.

#### [웰페어뉴스] 전업주부, '워킹맘'보다 스트레스·우울 심해

'전업모가 양육을 맡는 게 당연하다'는 사회적 인식이 한몫

2014.01.10

전업주부가 직장에 다니는 기혼여성에 비해 양육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고, 우울증의 정도도 더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육아정책연구소는 '어머니의 취업유형에 따른 영아의 기질, 어머니의 심리적 특성, 양육방식의 차이 연구'라는 논문을 10일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2009년 '한국아동패널 2차년도' 자료를 바탕으로 생후 18개월 미만의 자녀를 둔 여성 1,863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으며 일하는 엄마의 특성을 가장 잘 보여 줄 수 있는 정규직 엄마와 전업주부의 심리상태를 분석했다. 이에 따르면 전업주부는 정규직 엄마보다 부정적 심리지표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 일정한 직업을 가진 정규직 엄마의 경우 양육 스트레스가 전업주부보다 더 낮았다. 정규직 엄마의 양육 스트레스 지표는 2.67점이었으며 전업주부는 2.77점이었다. 우울감의 경우에도 정규직 엄마(1.82점)보다 전업주부(1.95점)가 더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과제 수행능력에 대한 신념이나 기대인 '자기효능감'과 자신에 대한 평가적 측면을 담고 있는 '자아존중감'은 정규직 엄마가 5점 만점에 3.78점, 3.58점이었고 전업주부인 엄마는 3.66점,

3.46점에 그쳤다. 전업모는 자기효능감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양육 과정에서 남편과 사회의 지원이 다른 집단에 비해 절실히 필요함을 느낄 수 있는 대목이다.

하지만 직업을 가졌다고 해서 모든 면에서 정서적인 안정감을 보이는 것은 아니었다. 비정규직 엄마의 자기효능감(3.66점)과 우울감(1.95점) 분야는 전업주부와 평균점수가 같은 것으로 나타난 것. 이는 직업의 '질'도 자녀가 있는 여성의 심리에 영향을 주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논문을 집필한 배재대학교 유아교육과 임현주 강사는 “전업주부가 정규직 어머니보다 양육 스트레스 점수가 높은 것은 전업모가 양육을 맡는 게 당연하다고 여기는 사회적 인식에서 비롯된다.”고 분석했다.

임 강사는 “현재 사회적 분위기에서 전업모는 취업모에 비해 인적 지원을 제대로 받을 수 없다.”며 “전업모의 자기효능감과 자아 존중감을 높이기 위해 양육과정에서 남편과 사회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취업모에게 긍정적인 심리 상태를 만들어 주려면 일자리 수의 증대에만 관심을 둘 것이 아니라 급여나 노동기간의 안정성이 보장된 정규직 제공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